

담당부서 : 사법지원실
 담당자 : 강종선 심의관
 공보관실 : ☎ 3480-1324



국민사법참여위원회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최종형태 결정

- 국민참여재판의 최종형태 결정을 위하여 2012. 7. 구성된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2013. 1. 18. 제7차 회의에서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최종형태(안)를 의결함
-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위 최종형태(안)에 관하여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2013. 2. 18. 서울법원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함
-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2013. 3. 6. 제8차 회의에서 공청회 결과를 논의한 후 그 결과를 일부 반영하여 최종형태를 확정 의결함
-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최종형태 요약
 - 배심원 평결의 효력 : 현행 권고적 효력보다 강한 효력을 부여하되 법적 기속력에까지는 이르지 않는 '사실상의 기속력'을 인정 ⇒ 배심원 평결 존중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
 - 평결방식 : 현행 단순다수결제를 폐지하고 가중다수결제 도입
 - 실시요건 : 피고인 신청주의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국민참여재판 회부 가능
 - 배심원의 수 : 현행 5인형을 폐지하고, 7인형 또는 9인형으로만 진행
 - 법정구조 : 검사와 피고인의 좌석을 민사소송의 원고와 피고의 좌석과 동일하게 배치

■ 향후일정

- 2013. 3. 대법원장 보고
- 2013년 중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① 최종형태 결정 과정

- 2012. 7. 12. 국민사법참여위원회(위원장 신동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구성
- 2013. 1. 18.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최종형태(안) 의결
- 2013. 2. 18.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최종형태 결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최종형태(안)에 관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 2013. 3. 6.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최종형태 확정 의결

② 최종형태의 주요내용

(1) 기본 전제

-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지난 5년 동안의 시행성과에 대한 분석 등을 토대로 1단계 국민참여재판제도가 그 동안 큰 문제점을 드러내지 않고 전반적으로 잘 운영되어 왔으며 형사재판제도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한 제도로서 앞으로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의견을 같이 함
- 다만, 국민참여재판제도 도입 당시부터 주요 쟁점이던 '배심원 평결의 효력'과 '실시요건' 등 일부 쟁점들의 경우에는 최종형태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소 수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그 밖에 세부적인 재판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도설계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현행 제도를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함

(2) 배심원 평결의 효력 - 사실상의 기속력(배심원 평결 존중의 원칙)

- 현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참여법률')은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배심원 평결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만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 최종형태는 위와 같은 '권고적 효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배심원의 평결에 대하여 '사실상의 기속력'을 부여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배심원 평결 존중의 원칙

을 법률에 명시하기로 함. 즉,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배심원의 평결결과를 존중하여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배심원의 평의·평결의 절차 또는 내용이 헌법·법률 등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평결결과와 달리 판결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양형에 관한 배심원의 의견은 종전과 같이 권고적 효력만 유지함

-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배심원 평결에 대하여 미국식 배심재판에서와 같은 법적 기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① 현행 헌법상의 적합성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고, ② 실증적인 분석 결과 아직 우리 사회에서 미국식 배심제 도입에 관한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현 단계에서 큰 무리 없이 일반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사실상의 기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채택함
- 배심원 평결에 대한 사실상 기속력 부여 방안에 대하여는 공청회 참가자들도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평가함

(3) 평결방식 - 가중다수결제 채택

- 현행 참여법률은 만장일치 평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만장일치가 되지 않은 경우 단순다수결 평결도 허용하고 있음
- 최종형태는 배심원 평결에 대하여 단순한 권고적 효력을 넘는 '사실상의 기속력'을 부여하는 것과 연계하여 단순다수결 평결을 폐지하고 배심원의 3/4 이상 찬성하는 경우에만 평결이 성립된 것으로 보는 '가중다수결제'를 채택함. 다만, 가중다수결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hung jury)에는 다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지 않고 배심원의 평결 없이 판결하되 배심원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함
- 최종형태에서도 평결의 원칙적인 모습은 만장일치이므로, 만장일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설령 가중다수결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심리에 참여한 판사의 설명을 들은 후 다시 평결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함
- 가중다수결제 도입에 대하여도 공청회 참가자들은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평가함

(4) 실시요건 - 일부 강제주의 도입

- 현행 참여법률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참여재판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신청주의)
- 그 동안 신청주의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거나 일반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의견을 재판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주요 사건들에 있어서는 피고

인이 신청을 하지 않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됨

- 최종형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강제주의적 요소를 일부 도입함
- 다만, 위와 같은 강제주의적 요소 도입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헌법상 권리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는 견해가 공청회에서 제시됨에 따라, 회부결정을 하기 전에 피고인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는 단서 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최종형태를 수정함

(5) 배심원의 수

- 현행 참여법률은 법정형에 사형·무기징역(금고)이 포함된 범죄는 9인형, 나머지 범죄는 7인형으로 하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5인형도 가능하도록 함
- 당초 최종형태(안)에서는 배심원의 수를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으나, 공청회에서 9인형을 기본으로 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인형으로 하며 5인형은 폐지하는 방안이 제시됨
- 이에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현실적으로 5인형의 비율이 전체사건의 10% 미만인 점 등을 고려하여 5인형은 폐지하되, 9인형은 현행대로 법정형에 사형·무기징역(금고)이 포함된 범죄에 대하여만 원칙적으로 실시하기로 함 ⇒ 다만, 현행 법률에 의하더라도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정형에 관계없이 7인형과 9인형을 선택할 수 있음

(6) 법정구조

- 현행 참여법률은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서로 대등하게 마주 보고 위치하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현행 법정구조에 관하여는, 검사석에서는 배심원의 표정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고, 피고인 및 변호인 석에서는 증인의 표정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 이에 최종형태는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이 민사법정에서의 원고와 피고처럼 대등하게 법대를 바라보면서 나란히 앉는 것으로 좌석배치를 변경함

(7) 기타

-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의 수, 유무죄 및 양형에 관한 배심원의 의견을 판결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함
- 민법상 성년자의 연령이 만 19세로 낮추어짐에 따라 배심원후보자의 연령을 만 19세로 낮추고, 평의 전 재판장 설명사항에 검사 주장의 요지를 포함시킴
- 그 밖에 배심원의 양형토의 및 의견제시,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권한, 배심원 및 공판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항소사유 등은 지난 5년 동안의 시행성과 분석 등에 비추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현행 제도를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함

(8) 최종형태 요약

	쟁점	의결내용
1	배심원 평결의 효력	○ 사실상 기속력 부여 : 배심원 평결에 대하여 법적 기속력을 부여하지 않지만, 법원의 배심원 평결 존중의무를 법률에 명시함 ○ 다만, 배심원 평결이 헌법·법률 등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
2	평결방식	○ 현행 단순다수결제를 폐지하고 가중다수결제(3/4 이상 찬성) 도입 ○ 평결불성립(3/4 이상 찬성 불성립) 시 배심원 평결 없이 판결 선고. 다만, 배심원 의견 참조 가능
3	실시요건	○ 피고인 신청주의는 그대로 유지 ○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국민참여재판 회부 가능 - 강제주의적 요소 일부 도입
4	배심원의 수	○ 현행 5인형을 폐지하고, 7인형과 9인형만 유지함
5	법정구조	○ 참여재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좌석 배치를 민사소송의 원고와 피고의 좌석 배치와 동일하게 함
6	기타	○ 배심원의 수, 유무죄 및 양형에 관한 배심원의 의견을 판결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함 ○ 배심원후보예정자의 연령을 만 19세로 낮추고, 재판장 설명사항에 '검사 주장의 요지' 포함 ○ 평의절차에서 법관의 의견제시, 배심원의 양형토의 및 의견제시, 법원의 배제결정권한, 배심원 관련 규정, 공판절차 관련 규정, 재판장 설명, 항소 부분은 현행 제도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그대로 유지

③ 향후일정

(1) 대법원장 보고

-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2013. 3.경 대법원장에게 위와 같이 확정된 최종형태를 보고할 예정임

(2) 입법추진

-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최종형태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형태로 작성됨
- 2013년 중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 <끝>